

#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그리스 경제 불안이 유럽 경제를 위협  
Economic instability in Greece threatens EU's economy
-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의회 위상 변화  
Authority of European Parliament strengthens under Lisbon Treaty
- EU의 카르텔 규제 강화  
EU's cartel regulation strengthens
- EU의 5대 미래유망기술 개발 현황과 과제  
Development of a common strategy for EU's key enabling technologies
- EU 경쟁법상 리니언시 제도의 현황 및 활용방안  
EU's leniency programme and process of leniency application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i.org](http://www.yonse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  |
|---|--|
|    | <b>EU Economy</b><br>그리스 경제 불안이 유럽 경제를 위협 ..... 002<br>Economic instability in Greece threatens EU's economy   |
|    | <b>EU Politics</b><br>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위상 변화 ..... 008<br>Authority of European Parliament strengthens under Lisbon Treaty   |
|    | <b>Trade Issues</b><br>EU의 카르텔 규제 강화 ..... 012<br>EU's cartel regulation strengthens   |
|   | <b>Industry Trends</b><br>EU의 5대 미래유망기술 개발 현황과 과제 ..... 015<br>Development of a common strategy for EU's key enabling technologies   |
|  | <b>EU Law</b><br>EU 경쟁법상 리니언시 제도의 현황 및 활용방안 ..... 020<br>EU's leniency programme and process of leniency applications  |
|  | <b>Social Issues</b><br>EU에 대한 영국인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편향성 ..... 024<br>Survey confirms UK's eurosceptic attitude   |
|  | <b>Report Review</b><br>2010년 유럽의 M&A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 ..... 028<br>One in five European firms planning M&A deal in 2010   |
|  | <b>EU Centre news</b><br>제5회 EU Core Circle 세미나 개최 ..... 030<br>The 5 <sup>th</sup> EU Core Circle Seminar<br>제4회 국회 브뤼셀 포럼 ..... 031<br>The 4 <sup>th</sup> Brussels Forum<br>제1회 일본-한국 간 EU 현황에 대한 워크숍 ..... 032<br>The 1 <sup>st</sup> Japan-Korea Graduate Students Workshop on EU Affairs |

# 그리스 경제 불안이 유럽 경제를 위협

## Economic instability in Greece threatens EU's economy

The Greek economy accounts for just 3% of the eurozone. However, the economic instability in Greece i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e depreciation of the euro since the late 2009 and it is also raising the level of risks in other vulnerable economies in the eurozone. A wide range of reasons for the crisis in Greece has been identified and it includes Greece's large budget deficit and government debt, previous government's populist policies, eurozone's structural problems, and inefficiencies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oth the Greek government and the EU are trying to solve these problems in order to bring the situation under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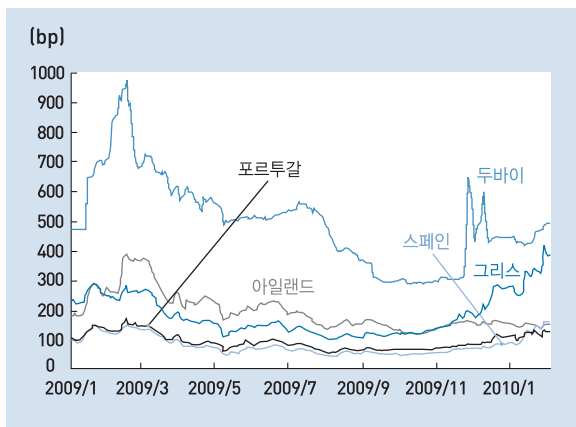
### 그리스의 경제 불안 요소

유로지역 전체 GDP의 3%밖에 안 되는 그리스 경제가 유럽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 경제는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유로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유로지역 경제는 물론 유럽 전체의 위협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11개 축구팀'으로 불렸던 유로지역 초기 멤버인 그리스가 오늘날 유럽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추락하게 된 구조적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언론과 매체들은 재정적자 확대, 높은 정부부채, 전 집권당의 실정, 유로지역 가입에 따른 부작용, 만연한 부정부채와 공무원 체계의 비효율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유럽 경제를 위협하는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고자 그리스 정부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2009년 12월 7일 S&P가 그리스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시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12월 8일에는 Fitch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조정하였고,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로써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스 국가신용도가 A 이하로 하락하였다. 두바이 사태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평가한 *Economist*지 역시 그리스의 국가부도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리스 사

### ★ 그리스 국채(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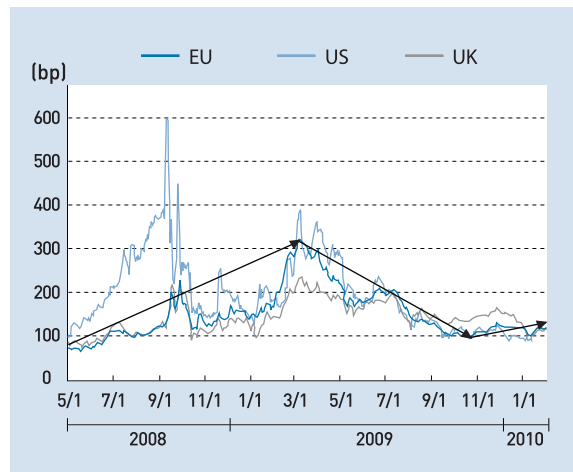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태는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동유럽 금융 불안이 잦아드는 반면 그리스 국채 CDS 프리미엄은 지속해서 급상승하고 있다. 동유럽의 헝가리와 라트비아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2009년 3월 이후 하락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의 국채 CDS 프리미엄은 2009년 11월부터 아일랜드를 상회하며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0년 1월 14일 337bp로 상승(아일랜드 159bp)하였고, 2월 2일 현재 387.47bp를 기록하였다.

그리스 사태는 유럽 은행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스트림(Datastream)

### ★ 은행부문 CDS 지수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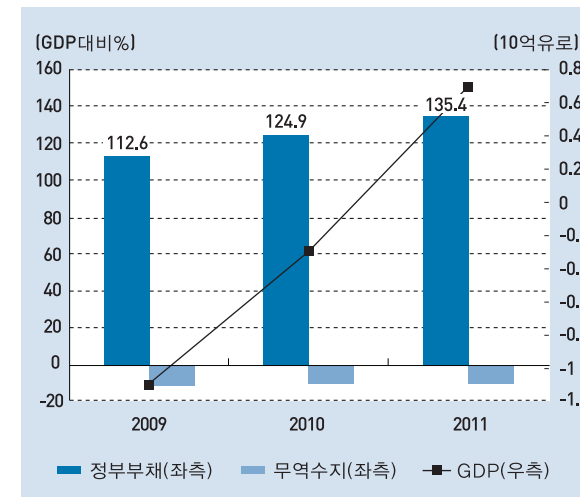
### 재정적자 확대와 정부부채 증가

2009년 10월 4일 그리스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한 후 그리스의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재무장관은 경제·재무각료이사회에 참석하여 그리스 재정적자에 대한 '고해성사'를 하였다. 내용인즉 알마니아 EU 집행위원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2009년 재정적자가 예상치인 6%가 아니라 GDP 대비 12%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후 11월 경제·재무각료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졌고 알마니아 EU 집행위원과 나머지 26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2009년 그리스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2/4분기에 정부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

또한 그리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9년 총 정부부채는 GDP의 11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2010년 그리스 정부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Economist*지는 1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정부부채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09, 10.), European Economic Forecast.

### 상품 수출경쟁력 하락과 더딘 경기회복

최근 몇 년간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리스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였던 것도 부분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두고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현 그리스 총리는 이전 신민주당(ND) 정부가 그리스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스는 2004년, 2007년 두 번의 총선으로 신민주당이 집권하였다가 2009년 10월 4일 총선으로 사회당(PASOK)이 집권하고 있다.

한편 상품의 수출경쟁력 하락은 그리스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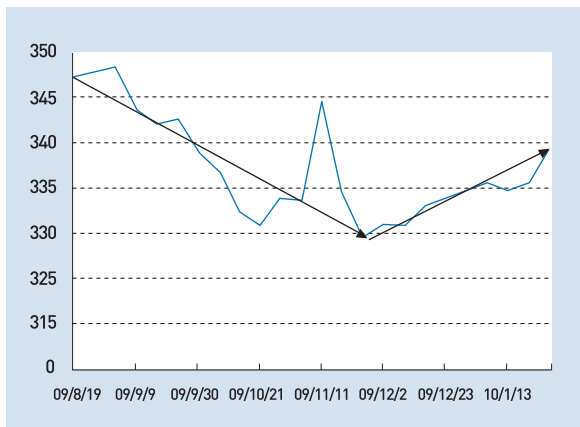
쉽게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유로지역 3/4분기 성장률(+0.4% qoq)에 비해 그리스(-0.3%)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주요 산업인 여행업과 해운 및 선박업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경기회복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

### 해운업의 위기

그리스 주요 산업의 하나인 해운 및 선박업이 2009년부터 불황을 맞고 있다. 2008년 1월 기준 유엔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는 일본(3,515척), 독일(3,208척), 중국(3,303척)을 제치고 선대 규모 세계 1위(총 3,115척 선박 보유)를 차지했다. 화물적화중량(dead weight ton: dwt)도 일본(1억 5,013만 dwt), 독일(7,964만 dwt), 중국(5,053만 dwt)보다 앞서 그리스가 세계 1위(총 1억 7,457만 dwt)이다.

그리스는 수상운송업 사업체 수가 2,747개, 취업자 수가 1만 3,000명에 달한다. 해운산업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외화소득산업이다. 또한 관련 산업의 연계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산업으로서 전천후 고용창출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이 불황에

### ★ 컨테이너 운임지수(HRCI)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흔들리면서 그리스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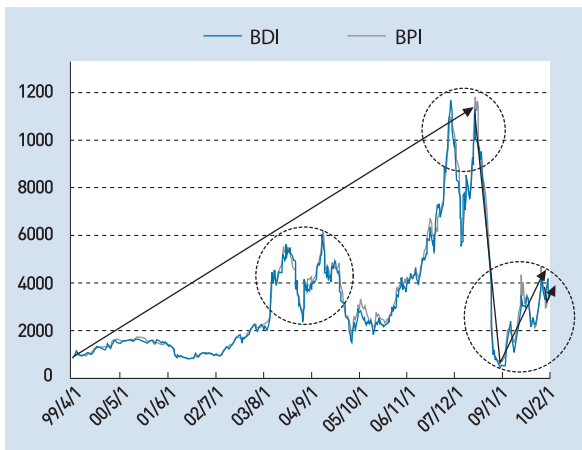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인 발틱운임지수(BDI)<sup>1</sup>와 BPI(Baltic Panamax Index)<sup>2</sup>, 컨테이너 운임을 나타내는 HRCI(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등 해운 및 선박업 관련 지수들의 하락은 그리스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유럽 신용도와 유로화 가치 하락

그리스 재정적자로 인한 유럽발 악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유럽 주요 15개국 국채 신용도를 보여주는 Markit iTraxx SovX 서유럽 지수<sup>3</sup>가 2009년 12월 초에는 57bp였으나, 2010년 1월 20일 현재 84bp로 상승했고, 2월 4일에는 102.5bp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리스 재정적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유로/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

### ★ BDI와 BPI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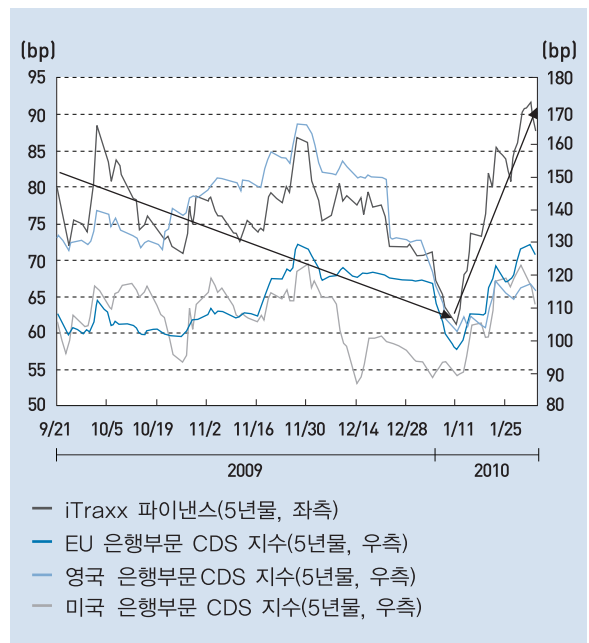
<sup>1</sup> 발틱해운거래소가 1985년부터 건화물시장 운임지수로 사용해진 Baltic Freight Index(BFI)를 대체한 종합운임지수. 선형에 따라 별도의 선형별 지수로 구성.

<sup>2</sup> 발틱운임지수 중 하나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배 운임지수.

<sup>3</sup> 유럽 15개국 국채 CDS 지수.

하고 있다. 2010년 1월 15일 1.44달러, 1월 22일 1.41달러, 1월 29일에는 1.39달러로 하락하면서 주요 지지선인 1.4달러가 붕괴되었다. 이로써 그리스 사태가 유로지역 신용위험의 증가와 유로화의 급락세를 유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 유럽 주요국 신용도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그리스 위기는 유로지역 국가들의 신용도를 위협한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정부와 민간 부문의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과 같은 취약한 국가 외에도 나머지 건설한 국가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는 점이다. 이미 8조 4,000억 유로(약 11조7,600억 달러)의 세계 2위 경제권인 유로화 사용 16개국(유로지역)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스와 동반 추락하고 있다.

### 그리스 정부는 과감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 청사진 제시

그리스 재무장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 스스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그리스 정부가 내세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과감한 재정적자 축소이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GDP의 12.7%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2010년 4%p 낮추고(GDP 대비 8.7%), GDP 대비 113%인 3,000억 유로 규모의 국가부채를 2012년까지 60%대로 축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출을 25%가량 줄일 것과 2010년 공무원 급여를 동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약속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진행될 공공부문 지출 축소안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향후 순탄하지 못한 노정을 거칠 예정이다. 2009년 12월 17일 교사, 국립병원 근로자, 부두 노동자 등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안에 대해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집권당인 사회당은 당의 정책노선상 사회복지분야에서 대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권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가 내세운 문제 해결의 다음 출발점은 국채발행을 통한 단기자금의 확보이다. 그리스 재무부는 2010년 1월 25일 80억 유로 규모의 5년 만기 국채 입찰에 총 250억 유로의 자금이 몰렸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2월 중으로 최소 30억 유로의 10년 물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에 성공하길란 쉽지 않은 일이다.

### EU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스 사태를 해결하는 데 EU가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EU 회원국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프랑



스 재무부는 2010년 1월 28일 EU의 국가들이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 *Le Monde*의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은 그리스 사태 해결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EU 경제·통화 담당위원 알무니아와 독일정부는 그리스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지지하고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다.

유로 그룹 의장 역시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막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EU 집행위원회와 유로 그룹은 그리스 정부에게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개혁정책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EU는 최근 그리스가 제출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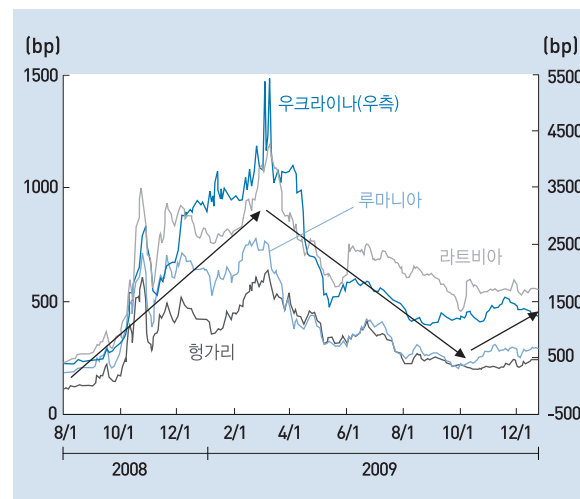
EU 차원에서 마련된 유로지역 국가에 대한 구제방안은 리스본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EU는 ① 경제 및 금융 위기에 빠진 회원국을 구제할 의무는 없으나(Article 125, ex Article 103 TEC)<sup>4</sup> 국가구제를 금지시킬 수 있고(Article 125(2), ex Article 103(2) TEC) 국가구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Article 122, ex Article 100 TEC). ② 또한 모든 금융지원은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며 EU는 강제적 권한이 없다.

####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국가에 주목

국가채무 비율이 높고 재정집행 규모가 큰 국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국채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으나, 그리스<sup>5</sup> 상승 압력으로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포르투갈도 S&P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며 등급 강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포르투갈의 국채 CDS 프리미엄은 아일랜드를 하회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2010년 1월 14일 124bp). 포르투갈의 2009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9.3% 수준으로 EU의 추정치(8%)를 웃돌았다. EU는 아일랜드의 재정적자가 GDP의 15%, 스페인이 1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유로지역 전체 가운데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2011년 역내 총생산의 88%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그리스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비단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부채 비율이 큰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 동유럽 국채(5년물)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또한 동유럽 금융 불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그 외 재정지출 규모가 큰 국가들 역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2008년 '동유럽 위기설'의 단초를 제공했던 국가들 역시 신용등급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상존한다. 최근 중·동유럽 일부 지역에서 경제회복의 조짐이 감지되면서 일부 은행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sup>5</sup> 이에 따라 중·동유럽에 대한 낙관론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EU와 IMF의 지원으로 지난해 말부터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의 경제가 건전한 재정 상태를 보이면서 이들에 대한 낙관론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발틱 국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는 경기후퇴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수익여신의 증가로 은행들이 고전하고 있다.

#### 지나친 비관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인 입장과 달리 2010~2011년 그리스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무라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1990년대 초 GDP 대비 10% 수준이었던 그리스 정부의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 규모가 2011년 GDP 대비 5%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201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국채이자지급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을 발표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선호 행태를 바꿈으로써 한 국가경제를 어렵게 만든 신용평가사들의 권한 남용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이번 그리스 사태에 대한 *Economist*지의 우려는 지나친 비관론일 가능성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Economist*지는 금융기관 채무의 지급보증 등에 따른 우발성 채무까지 고려할 경우 그리스의 국가부도위험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15일 현재 그리스가 금융위기로부터 자국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한 구제금융 규모는 2008년 GDP의 11.6%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G20 EU 평균

(32.3%), 프랑스(19%), 독일(22.2%), 스페인(22.8%), 스웨덴(70%)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물론 그리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비록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증은 언제든지 커다란 위협요소로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나친 비관론과 지나친 낙관론 모두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up>5</sup>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UniCredit)는 100개 지점 개설 계획,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인터내셔널(Raiffeisen International)은 온라인 중심의 은행 서비스 출시를 준비, 오스트리아 에르스테(Erste) 은행은 루마니아에 70개 지점 개설 계획 등.

<sup>4</sup> Article 125(ex Article 103 TEC)는 '구제금융 금지규정(No bailout rule)'으로 알려져 있음.



#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위상 변화

## Authority of European Parliament strengthens under Lisbon Treaty

The authority of the European Parliament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and it is playing a key role in shaping the EU's future. The Parliament is the only EU institution where its members are elected by the EU's civilians and hence the expansion of the parliament's role is expected to partially solve the problem of its democratic deficit. However, the parties at the European Parliament seem to represent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it seems unlikely that we will see parties representing the EU as a whole gaining significant power any time soon. Also, the Parliament has a number of institutional problems that limits its ability to become a highly politically integrated organisation such as the US Congress.

### 리스본조약 이후 신임 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는 지난 1월 11일부터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후보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 인도주의 업무, 위기대응 담당 분야 집행위원으로 내정되었던 불가리아 출신의 루미아나 엘레바(Rumiana Jeleva) 후보자가 낙마하였다. 루미아나 엘레바는 지명 당시 불가리아 외무부 장관이었다.

루미아나 엘레바는 1월 12일 유럽의회에서 열린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후보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았다. 엘레바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왔다. 또한 엘레바 후보는 비즈니스 활동과 금융거래에 관한 질문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도 증폭되었다.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엘레바 후보가 '글로벌 컨설트'라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했다가 매각했는데,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다. 엘레바 후보는 2009년 7월 불가리아 외무장관이 되기 직전에 '글로벌 컨설트'와의 업무상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급히 지분을 매각했다.

엘레바 집행위원 후보자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자 엘레바의 소속정당인 불가리아의 '유럽발전 시민당(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 GERB)'이 속한 유럽의회의 인민당에서

### ★ 청문회 대상 EU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후보

| 이름                    | 출신국가  | 집행위원회 담당총국                          |
|-----------------------|-------|-------------------------------------|
| Catherine Ashton      | 영국    |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로서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 겸임 |
| Joaquin Almunia       | 스페인   | 경쟁정책                                |
| Michel Barnier        | 프랑스   | 역내시장 및 서비스                          |
| Olli Rehn             | 핀란드   | 경제통화 정책                             |
| Dacian Ciolos         | 루마니아  | 농업                                  |
| John Dalli            | 몰타    | 보건 및 소비자 정책                         |
| Karel De Gucht        | 벨기에   | 무역                                  |
| Stefan Füle           | 체코    | EU 확장                               |
| Connie Hedegaard      | 덴마크   | 기후관련 정책                             |
| Maire Geoghegan-Quinn | 아일랜드  | 연구 및 혁신                             |
| Janusz Lewandowski    | 폴란드   | 예산 금융 편성                            |
| Guenther Oettinger    | 독일    | 에너지                                 |
| Janez Potocnik        | 슬로베니아 | 환경                                  |
| Neelie Kroes          | 네덜란드  | 디지털 어젠다                             |
| László Andor          | 헝가리   | 고용, 사회 정책 및 통합                      |
| Maria Damanaki        | 그리스   | 해운 및 어업                             |
| Johannes Hahn         | 오스트리아 | 지역정책                                |
| Rumiana Jeleva        | 불가리아  | 국제협력, 인도주의 업무, 위기대응                 |
| Siim Kallas           | 에스토니아 | 운송                                  |
| Cecilia Malmström     | 스웨덴   | 내무                                  |
| Andris Piebalgs       | 라트비아  | 개발                                  |
| Viviane Reding        | 룩셈부르크 | 사법, 기본권 및 시민권                       |
| Algirdas Šemeta       | 리투아니아 | 조세 및 관세동맹                           |
| Antonio Tajani        | 이탈리아  | 산업 및 기업 업무                          |
| Androulla Vassiliou   | 키프로스  | 교육, 문화, 다언어 및 청소년                   |
| Maros Sefcovic        | 슬로바키아 | 국제관계 및 행정                           |

자료: EU Commission

엘레바를 지원하는 발언이 나왔다. 유럽의회 인민당 대표인 조셉 돌(Joseph Daul)은 이번 스캔들이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엘레바 후보를 두둔하였다. 또한 같은 유럽의회 인민당인 포르투갈 사민당 출신의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엘레바를 지원하면서 유럽의회 담당 소위원회에 서한을 보냈다.

유럽의회 인민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1월 19일 루미아나 엘레바 후보는 불가리아 총리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ov)에게 유럽의회 집행위원 후보직 및 불가리아 외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불가리아 정부는 루미아나 엘레바 대신 세계은행 부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를 국제협력, 인도주의 업무, 위기대응 담당 분야 집행위원 후보로 지명하였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2월 3일에 열렸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국제협력, 인도주의 원조, 위기대응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로 인해 원래 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EU 집행위원단 전체에 대한 유럽의회 인준투표는 2월 9일로 연기되었다. 2월 9일 전체 인준투표가 통과하면, 주제 마누엘 바호주 2기 집행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 유럽의회의 위상 변화

유럽의회는 유럽공동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1951년 4월 18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이 조인되었을 때, 각국 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의회(Common Assembly)'를 설치하였다.

공동의회의 당시 임무는 현재 집행위원회에 해당하는 '고등기관(High Authority)'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을

주장했던 선언문에는 '공동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공동의회 설치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장 모네(Jean Monnet)가 고등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구상이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의 20조는 '시민 대표성(representatives of the peoples)'에 관련된 내용

### ★ 공동의회 회원국별 의원 수

| 회원국   | 의원 수(명) |
|-------|---------|
| 프랑스   | 18      |
| 이탈리아  | 18      |
| 독일    | 18      |
| 벨기에   | 10      |
| 네덜란드  | 10      |
| 룩셈부르크 | 4       |

자료: EU Commission

이다. 이로써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공동의회'는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기존의 국제기구의 총회(예를 들어 유엔 총회)와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 21조에는 공동의회가 각국 의회에서 파견된 대표나, 보통직접선거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공동의회'는 의회 모델에 기반을 둔 최초의 국제기구의 총회가 되었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 공동체가 창립되었을 때, 단일의회가 유럽경제공동체와 원자력 공동체의 임무도 관할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칭은 "유럽 의회연합(European Parliamentary Assembly)"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62년 3월 20일부터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 명칭은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서 공식화되었다.

한편, 1960년대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의회를 각국 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의 성격에서 유럽 시민의 의







지를 펼칠 수 있는 열린 포럼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드골 정부가 이에 반발하여 유럽의회는 각국 의회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었다.

드골은 유럽의회가 예산심의에 관련된 권한과 입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며, 보통직접로 선출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드골은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가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유일한 입법기관

★ 유럽의회 회원국별 의원 수(로마조약 의거)

Table with 2 columns: 회원국 (Member State) and 의원 수(명) (Number of Members). Rows include France (36), Italy (36), Germany (36), Belgium (14), Netherlands (14), Luxembourg (6).

자료: EU Commission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의회의 입법권 및 감독통제권한이 확대되었다. 1971년 3월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조르주 베델(Georges Vedel)이 주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유럽의회의 예산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1972년 3월 25일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유럽의회의 공동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보통직접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구성을 옹호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보통직접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구성은 진정한 유럽정부를 구상하던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프랑스 대통령이 1974년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서

야 가속화되었다. 1976년 7월 12~13일 그리고 9월 20일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보통직접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구성이 채택되었다.

최초 유럽의회의 보통직접선거는 1978년 5~6월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각국에서의 비준절차 문제로 1979년 6월 7일과 10일로 연기되었으며, 41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1979년 유럽의회는 보통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지만, 입법권한을 갖지는 못했다. 당시 유럽의회가 가진 권한은 1970년대 들어 확대되어온 예산권한뿐이었다.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유럽단일의정서」가 채택되면서부터였다. 「유럽단일의정서」는 유럽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동의절차(Assent Procedure)’와 ‘협조절차(Cooperation Procedure)’를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의회는 그동안 각료이사회가 독점하였던 입법권한을 갖기 시작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협조절차(Cooperation Procedure)’와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가 도입되어 유럽의회의 권한이 한층 확대되었다. ‘공동결정절차’의 도입으로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동등한 입법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히 암스테르담조약 이후 ‘공동결정절차(Co-decision)’는 EU 입법의 대부분의 분야로 확대되었고, ‘공동결정절차’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암스테르담조약 이후 법안은 ‘공동결정절차’에 의해 진행되는데, 유럽의회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안은 채택될 수 없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유럽의회에 의한 공동결정절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유럽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집행위원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993년 발효되기 전까지,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임명 과정과 신임, 불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현재 EU 집행위원은 각국 정부가 집행위원장의 동

★ 리스본조약으로 확대된 공동결정 절차

Table with 2 columns: 공동결정절차에 추가된 기존 EU 정책 분야 (Existing EU Policy Areas Added to the Co-decision Procedure) and 리스본조약으로 도입된 정책 분야 (Policy Areas Introduced by the Lisbon Treaty). Rows list various policy areas like agriculture, visas, environment, etc.

자료: EU Commission

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의회는 이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 이후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단이 집단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의원내각제의 내각 신임과 비슷한 제도가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간에 마련되었다.

이러한 유럽의회의 권한은 1999년 자크 상테르(Jacques Santer) 집행위원회의 일부 집행위원이 부패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실제로 행해졌다. 유럽의회가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집행위원회는 집단 사퇴하였다.

2004년 이탈리아가 바호주 집행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로코 부티리오네(Rocco Buttiglione) 사법 담당 EU 집행위원 후보자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여성은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여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파문을 일으키자, 유럽의회 산하 소위원회인 ‘시민 자유 소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그의 신임을 거부하였다. 결국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신임 집행위원단 명단에서 부티리오네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럽의회는 설립 이후 각료이사회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던 그 권한을 점차 확대하여왔고, 현재는 대부분의 EU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EU 기구 중 유일하게 시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유럽의회의 권한 확대는 EU의 고질적인 문제인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유럽의회 선거가 각국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고, EU 전체를 대표하는 정당이 몇 년 안에 출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인 이유로 정기회기는 스트라스부르에서, 특별회기는 브뤼셀에서 열리며,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있어 행정 통합에 문제가 있는 유럽의회는 아직 미국의회와 같은 정치 통합성의 상징이 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안상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EU의 카르텔 규제 강화

## EU's cartel regulation strengthens

In recent year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regulations to bring down cartels as major economies have been deeply concerned that cartels will affect the operation of the market.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nancial crisis, the number of incidents of charging penalties against emerging economies' corporations has been rising as their performanc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mproving in relative terms. The EU is renowned for its strict competition law that it is applied equally to 27 countries. Korean firms must prepare against possible future investigations and be aware that the EU may strengthen its regulations even further.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카르텔 규제가 심화되는 추세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카르텔(담합)과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카르텔이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기업들이 약진을 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특히 선진국들 간의 카르텔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EU는 누가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제담합 소탕에 성공하는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시 정부가 공정경쟁 관련법 집행에 지나치게 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국제 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미국 법무부가 제재를 가한 주요 대상 중에는 EU 업체들이 많았다.

EU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인텔사에 10억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는 2008년 인텔 총매출의 4% 수준이자 순이익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인텔이 휴렛팩커드와 델, 레노버 등 PC 업체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경쟁사인 AMD의 중앙처리장치(CPU)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텔이 수년간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통해 유럽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 EU는 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공정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나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것이 EU의 경쟁법인데, EU 27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EU 경쟁법은 역내시장에서 노동자, 상품,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음의 4가지가 경쟁법상의 주요 정책이다.

이 중에서도 EU집행위원회는 “EU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 순위는 카르텔 적발과 제재다”라고 밝힐 정도로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EU집행위원회가 개별 회원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 ★ EU 경쟁법의 주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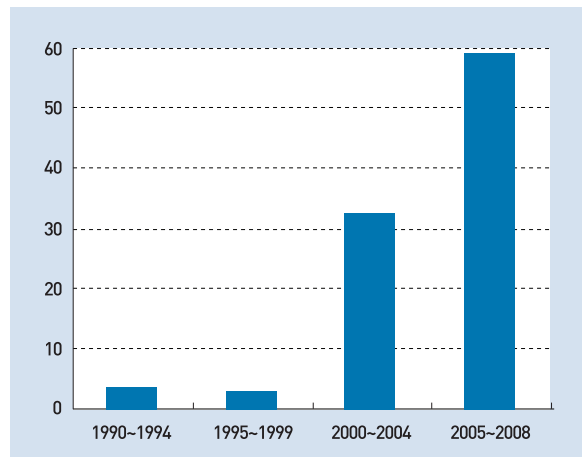
|      |  |
|------|--|
| 카르텔  | EU 및 유럽 경제 영역에서 벌어지는 담합과 과점에 대한 규제                           |
| 독점   | 기업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저지                                 |
| 기업합병 | EU 및 유럽 경제 영역에서 일정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관여하는 합병, 인수, 합작사업에 대한 통제 |
| 정보보조 | EU 가입국의 직·간접적인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통제                                |

자료: EU Commission

이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방식과 상한에 대한 재량권은 전적으로 EU집행위원회에 귀속되어 있는데, 보통 해당 기업의 매출액에 위반 지속 기간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상한 30%)을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또한 상한은 대상 기업의 그룹 전체 연간 총매출의 10%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매출액이 대상이 된다. EU 자회사의 매출이 적더라도 EU에서 적발될 경우 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엄격한 제재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 대상 기간을 최장 3년 정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과징금 대상도 법인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EU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추이

(단위: 억 유로)



자료: EU Commission

이렇듯 엄격한 EU의 과징금 부과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카르텔 과징금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1990~1994년에는 3억 4,400만 유로, 1995~1999년에는 2억 7,100만 유로, 2000~2004년에는 전 기간의 약 12배에 달하는 32억 5,100만 유로로 치솟았다. 특히 2005~2008년에는 59억 3,000만 유로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00년 이후의 카르텔 과징금 증가 폭이 현저하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U 카르텔국 직원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2005년 6월 50명의 인원으로 시작한 카르텔국은 직원 수를 2007년과 2009년 각각 20명씩 증원할 정도로 강력한 조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EU의 리스본전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본전략을 통해 EU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형 경제로 만든다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유럽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요소이다. EU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가 역내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관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EU의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향후 EU의 카르텔 제재 강화 행보는 그 범위와 정도가 각각 확대되고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경쟁법은 GDP 18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EU 시장을 배경으로 집행되는 공동 정책인 만큼 개별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상당 기간 엄격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EU의 카르텔 규제 강화에 대비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

EU의 카르텔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2009년 EU로부터 약 2,226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최근 한국기업들이 추진 중인 M&A의 경우에도 유럽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한-EU 경쟁협력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집행위원회가 법 집행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제 카르텔 등에 대한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경쟁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EU 시장 개척에만 주력한 나머지 EU 경쟁법의 규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동업자 모임에서 카르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누군가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하여 신고한 경우, 자신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리를 뜨는 등 모임에서 이탈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그 신고자도 카르텔에 참여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카르텔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 요건이다. 먼저 예방책으로는 임직원들에 대한 경쟁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경쟁사 임직원과 만나지 말 것, ② 경쟁사와 가격·거래조건·수량·설비증설·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정보 교환·합의 금지, ③ 사업자단체 회의 시 가격동향·신제품 출시·시장상황 등에 관한 대화 금지, ④ 기업 내부 문서 작성·보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⑤ 국가별 경쟁법 준수, ⑥ 최고경영자 솔선수범, ⑦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국제카르텔 예방 행동준칙 지속 교육·실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경쟁당국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관련 처벌을 사면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Leniency Programme<sup>1</sup>). 담합 조사가 발표된 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 단 몇 시간 차이로 사면 신청을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도 카르텔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

공정경쟁법을 강도 높게 집행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공정경쟁법에서의 외국 기업에 대한 각국의 제재가 상대국과의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

런 논란 속에서도 한국기업들이 하루 빨리 카르텔에 대한 인식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만큼 한국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법 준수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CEO부터 철저한 경쟁법 준수의를 가지고 전사적으로 경쟁법에 대한 인식을 확립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의 5대 미래유망기술 개발 현황과 과제

## Development of a common strategy for EU's key enabling technologies

The European Commission expects the potential of industries and global corporations' future competitiveness to be significantly transformed in the next 5 to 10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deployment of key enabling technologies(KETs) will be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economic development. KETs are knowledge intensive and they are associated with a high level of R&D intensity, rapid innovation cycles and highly-skilled employment. In order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KETs under a coherent strategy on European level, the Commission has identified five KETs- advanced materials, nanotechnology, micro- and nano-electronics, industrial biotech, and photonics- as priorities.

###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미래유망기술

EU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성과 경쟁력이 5~10년 사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선두기업의 미래유망기술(Key Enabling Technology) 개발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sup>1</sup> 미래유망기술은 지식집약형 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빠른 속도의 기술 혁신 사이클을 갖고 있으며, 활발한 R&D 투자와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한다. EU 국가들은 미래유망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상당부분 중복되는 EU 각국의 미래유망기술을 EU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연구결과 및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나노기술,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공학기술, 광학기술, 첨단소재 개발기술 그리고 생명공학을 5대 미래유망기술로 선정하였다.

나노기술은 나노미터<sup>2</sup> 크기의 물질을 조작하여 제품, 기계, 시스템 등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 나노기술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7년 1,470억 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오는 2015년에는 3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sup>3</sup>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나노기술 시장의 40%를, 유럽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미국과 EU가 각각 세계 나노기술 시장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이크로 및 나노 전자공학기술은 반도체 부품과 전자기기 시스템의 부속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2008년 세계 마이크로 전자기기 시장 규모는 200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2,610억 달러였다. 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들은 주로 정보 프로세스와 정보통신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항공우주산업의 수요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마이크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스마트 생산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개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우주산업의 마이크로 전자기술 및 노하우는 항공, 자동차, 방위 산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광학기술은 빛에 관한 여러 현상 및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기계를 제작·관리하거나 원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태양빛을 전기로 전환할 때 사용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2008년 세계 광전자 부품시장 규모는 3,560억 달러였고, 2020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세계 부품시장의 8%를 차지한 친환경 광전자 부품은 2020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전자 기술

<sup>1</sup> EU Commission (2009, 9. 30.). Preparing for our future: Developing a common strategy for key establishing technologies in the EU.

<sup>2</sup> 1미터의 10억분의 1.

<sup>3</sup> LuxResearch (2009). Nanomaterials of the Market Q1 2009: Cleantech's dollar investments, Penny returns.





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시장의 규모는 2008년 2,000억 달러였고, 2020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sup>4</sup>

첨단소재는 기존에 사용하던 소재를 대체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더욱 높은 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첨단소재 개발을 통해 국가는 자원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첨단소재는 천연자원이 비교적 풍부하지 않은 유럽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소재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큰 산업으로는 에너지(축매, 건전지), 친환경(폴리머, 스마트 패키지), 의료(조직공학), 수송(항공우주, 자동차), 정보통신, 섬유 산업 등이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화학제품, 첨단소재, 연료생산에 사용되며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다. 화학제품 생산에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되는 비중은 2005년 2% 미만에서 2010년 9~13%로 증가하고, 시장 규모는 1,300~1,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제품 전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 규모는 연 40~5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sup>5</sup>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들은 이미 많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 가축사료, 세제 산업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화학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 효소 관련 제품시장 규모는 2008년 21억 유로였다. 또한 최근에는 농산물 폐기물을 재사용하여 생화학물질, 생물고분자물질, 생물연료를 생산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 글로벌 R&D 시장에서 뒤처지는 EU

미래유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R&D 투자가 필요하다. EU 국가들은 2010년 R&D 투자 목

표치를 GDP의 3%로 정하고 EU는 ‘유럽연구영역(European Research Area)’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각국의 R&D 활동을 EU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다.<sup>6</sup>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EU가 세계 R&D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이후 5~6년간 연구원 수, R&D 지출 규모, 특허출원 건수에서 EU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0.5%p, 2.0%p, 5.1%p 줄어들었고, 미국의 비중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아시아 주요국들의 비중은 늘어났으며, 특히 특허출원 건수 비중은 7.8%p나 증가하였다.

EU27의 R&D 지출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14.8% 증가하였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10.1%와 21.9% 증가하였다. EU 국가들의 R&D 지출 증가율은 벨기에가 3.4%, 에스토니아가 211%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발틱 3국과 키프로스이다. 2006년에 독일, 프랑스, 영국이 EU R&D 총 지출액인 2,138억 유로의 각각 27.5%, 17.7%, 15.9%를 차지하였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정부예산 중 R&D 지출 비중은 20개 EU 회원국에서 증가하였다.

### ★ 전 세계 R&D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구분   | 연구원 수 |      | R&D 지출 |      | 특허출원 건수 |      |
|------|-------|------|--------|------|---------|------|
|      | 2000  | 2005 | 2000   | 2006 | 2000    | 2005 |
| 미국   | 26.8  | 24.0 | 38.6   | 34.6 | 39.7    | 33.1 |
| EU27 | 23.0  | 22.5 | 26.4   | 24.4 | 36.0    | 30.9 |
| 아시아  | 17.2  | 17.3 | 18.6   | 19.7 | 12.7    | 20.5 |
| 기타   | 32.9  | 36.2 | 16.4   | 21.3 | 11.6    | 1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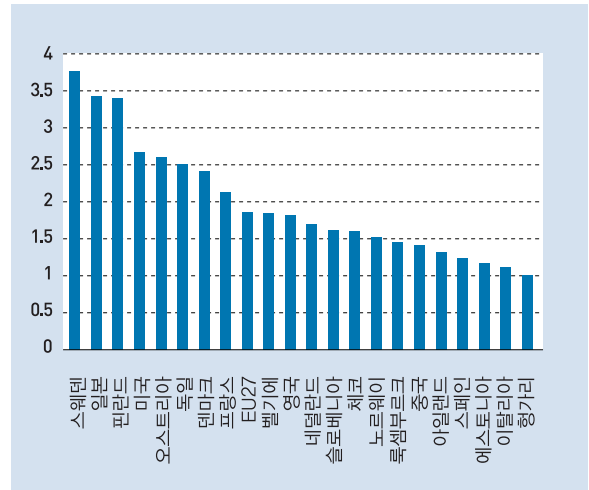
주: 아시아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비중을 합한 값  
자료: Eurostat; OECD; UNESCO; European Commission (2009), A more research-intensive and integrated European Research Area: Science,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EU 기업의 투자가 총 R&D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EU의 R&D 집약도는 미국, 일본, 한국에 비해 낮다.

<sup>6</sup> 2000년 3월 EU 회원국 수반들은 EU를 2010년까지 지식기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Employment이라고 부름.

EU27의 기업부문 R&D 집약도<sup>7</sup>는 2000년 1.05%에서 2006년 1.00%로 소폭 하락한 반면, 정부부문 R&D 집약도는 과반수 이상의 EU 국가들에서 상승하여 EU는 0.63~0.64%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 ★ 2006년 주요국의 R&D 집약도 (GDP 대비 지출) (단위: %)



주: EU집행위원회는 R&D 집약도가 가장 높은 5개 EU 회원국들을 high,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의 3개 회원국들을 medium-high, GDP 대비 1~1.7%를 기록한 9개 회원국들을 medium-low, GDP 대비 1% 미만의 10개 회원국들을 low로 구분  
자료: Eurostat; OECD,

### EU의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현황과

#### 경쟁력 분석

EU의 하이테크 산업은 2003년 기업부문의 R&D 집약도가 미국에 비해 60% 낮았고,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 낮았다.<sup>8</sup> EU의 하이테크 기술 개발능력도 미국보다 낮다. EU27이 총 특허출원 건수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5년 30.9%로 하이테크 기술 특허출원에서 차지한 비중보다 높다. 미국은 총 특허출원에서 차지한 비중이 33.1%를 차지

<sup>7</sup> 2006년 일본, 한국, 미국, 중국의 기업부문 R&D 집약도는 각각 2.62%, 2.43%, 1.69%, 0.98%를 기록.

<sup>8</sup> 2003년 EU와 미국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업부문 R&D 집약도는 각각 0.47%와 0.75% 기록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 중 하이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0%와 18.3%를 기록.

했는데, 하이테크 기술 특허출원에서 차지한 비중보다 낮아 EU27과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EU27이 정보통신기술 특허출원 건수

### ★ 주요국의 하이테크 기술별 특허출원 비중 (단위: %)

| 구분   | 정보통신기술 |      | 나노기술 |      | 바이오기술 |      |
|------|--------|------|------|------|-------|------|
|      | 2000   | 2005 | 2000 | 2006 | 2000  | 2005 |
| 미국   | 44.8   | 34.6 | 51.0 | 42.9 | 49.2  | 39.7 |
| EU27 | 31.0   | 24.8 | 24.8 | 26.6 | 24    | 24.9 |
| 일본   | 11.8   | 18.3 | 14.1 | 14.1 | 8.1   | 17.5 |
| 한국   | 2.2    | 4.6  | 0.5  | 3.6  | 1.2   | 2.3  |
| 중국   | 0.6    | 4.2  | 0.6  | 1.5  | 9.5   | 1.3  |
| 캐나다  | 2.3    | 2.1  | 2.2  | 1.4  | 2.5   | 3.3  |

자료: Eurostat; OECD,

에서 차지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EU27의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 특허출원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앞으로 아시아 주요국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나노기술은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은 탄탄한 나노기술 연구기반을 갖고 있다. 2008년 EU의 공공부문 나노기술 R&D 투자 규모는 26억 달러<sup>9</sup>로 미국의 19억 달러, 아시아의 28억 달러에 견줄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럽은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 상업화하는 노력과 이에 필요한 자금이 타 국가들에 비해 부족했다. EU 기업들의 나노기술 R&D 투자는 17억 달러로 미국의 27억 달러와 아시아의 28억 달러에 비해 저조하다. 또한 EU의 나노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보다 적다.<sup>10</sup> 유럽 항공우주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급 기

<sup>9</sup> 전 세계 공공부문 나노기술 R&D의 30%.

<sup>10</sup> 미국은 389건, EU27은 239건 출원.







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7년 EU는 마이크로 전자기술에 전 세계 R&D 투자 규모의 10%인 280억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4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럽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0년 21%에서 2008년 16%로 하락하였다. EU의 마이크로 전자 제품 시장 내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EU 특정 국가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유럽에서 생산된 마이크로 전자부품 수요의 19%가 자동차산업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세계 마이크로 전자부품 수요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8%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은 자동차산업에 필요한 마이크로 전자공학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EU는 광학기술을 사용하는 LED와 태양전지 산업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하는 제조업의 선두주자이다. 약 5,000개의 제조업체들이 있는 유럽 광학제품산업의 총수익 규모는 2006년 490억 유로였고,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5년 세계 광학제품 생산의 19%를<sup>11</sup> 차지한 유럽의 광학제품산업은 총 매출액의 9%인 33억 유로를 R&D에 투자했다.

유럽은 첨단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뛰어난 연구 역량을 갖고 있다. 주요 소재를 생산 및 사용하는 EU 산업의 R&D 규모는 연 440억 유로로 미국(250억 유로)과 일본(235억 유로)보다 많다. EU의 주요국들은 첨단소재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의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sup>12</sup>은 연평균 1억 2,000만 유로를,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2007년 2억 5,700만 달러를 신소재 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생명공학, 특히 효소공학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2005년 117개의 세계 주요 효소 생산업체 중 64%는 EU에, 18%는 미국에 위치해 있었고, 세계 효소 생산량의 75%가 EU에서 생산되었다. 2006년 세계 주요 기업들은 생명공학 관련 R&D에 3,13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유럽 기업들이 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 EU의 미래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과제와

#####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미래유망기술은 앞으로 EU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기술들은 초고속 통신과 새로운 교통수단 개발, 고령화 사회의 높은 의료수준 유지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U는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위해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EU는 R&D 결과<sup>13</sup>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EU의 R&D 결과가 타 지역에서 상업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2006년 EU27, 일본, 미국의 연구원은 노동인구 1,000명당 각각 5.6명, 10.7명, 9.3명이다. EU에서 과학 및 공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비중이 일본과 미국보다 높지만 개발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EU는 고위험, 고비용 성격의 미래유망기술 개발에 필요한 벤처 자금과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05년 미국은 EU보다 3배 많은 벤처 자금을 하이테크 산업에 투자하였다. 마지막으로 EU 각국의 미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계획과 지원은 EU 차원

<sup>11</sup> 2005년 일본은 32%, 한국은 12%, 대만은 11%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광학제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북아메리카는 15%를 차지.

<sup>12</sup> EU는 1984년 제1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을 시작으로 현재 532억 유로의 예산을 가진 제7차 (2007~2013년)를 진행 중. EU는 국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공동의 과학기술 발전과 유럽의 순수과학연구 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프로그램을 FP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 현재 FP는 27개 EU 회원국과 9개 회원후보국 및 준회원국 등 총 3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기술 선진국인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EU 비회원국은 연구 컨소시엄에 파트너로 참여하며 연구비는 자체 조달하고 있는 상황. <www.fp.or.kr>

<sup>13</sup> 2006년 세계 과학논문 발표 건수 중 EU27, 미국, 일본이 각각 39.7%, 33.5%, 9.2%를 차지.

의 조율이 필요하다. EU 국가들은 분업과 리서치 등의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정부 또한 미래유망기술 개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바이오/나노, 소프트웨어, 로봇, 차세대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신재생/그린 에너지 산업을 미래선도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는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sup>14</sup>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 강국' 진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선진국 대비 60% 정도인 한국의 핵심소재 기술 수준을 2018년까지 90% 수준으로 발전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10대 소재별로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일관화하고, '개방형 기술혁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세계 R&D 자원 및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현재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려는 '나노융합 2.0 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0년까지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 과정에 1조 원을 지원하여 나노기술 핵심 5대 분야를<sup>15</sup> 발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이 세계 하이테크 기술 특허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06년 R&D 집약도는 3.23%로 EU의 1.8배를 기록하였다. 세계 R&D 시장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EU는 여전히 미국과 함께 R&D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

<sup>14</sup> 지식경제부는 10대 WPM(World Premier Material) 기준을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에서 30% 이상 점유율을 갖는 소재로 규정하고 있음. 지식경제부 (2009. 11.).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sup>15</sup> 나노일렉트로닉스, 나노소재, 나노공정·측정 장비, 에너지·환경, 바이오·메디컬 등.

<sup>16</sup> EUREKA 또는 'E!'는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유럽 공동 R&D 네트워크로 1985년에 설립됨. 제24차 유레카 각료회의에서 체결된 「한-유레카 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한국은 유레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과 국내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 발의 및 운영권을 갖게 됨.

국 기업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한국은 2009년 6월 유럽의 다자간 R&D 커뮤니티인 유레카<sup>16</sup>에 비유럽국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한-유럽 기업 간의 R&D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EU 경쟁법상 리니언시 제도의 현황 및 활용방안

## EU's leniency programme and process of leniency applications

The EU's leniency programme offers companies involved in a cartel either immunity from fines or a reduction of fines if they self-report and hand over evidence. Similar programmes have been adopted in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US adopted such programme in 1993 and Australia and Canada in 2000, and they seem to have benefited significantly as their policies have been highly effective. The effects of competition law and leniency programmes being widely discussed today seems to reflect this trend.

### 리니언시 제도의 중요성 증대

리니언시 프로그램(Leniency Programme: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하 리니언시 제도)은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집행당국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개시 후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낮추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효용은 카르텔에 동참하거나 동참하려는 사업자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카르텔 형성과 유지를 방지함으로써 카르텔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 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카르텔을 쉽게 적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기능이다.

리니언시 제도는 오늘날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 카르텔 적발과 예방의 주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부터, 호주와 캐나다는 2000년부터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여 카르텔의 적발 건수를 크게 늘렸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카르텔 제재 수준과 리니언시 제도가 최근 국제적 논의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각국은 경쟁당국의 카르텔 제재 수준 감면 재량을 축소하여 동 제도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고 있다.

### EU집행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 고시

EU집행위원회는 종래의 위원회고시(2002)를 대신하는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위원회고시(2006)'를 채택하였다. 이 고시는 EU 리니언시 제도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는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카르텔 자진 신고 중 95%는 두 기업 이상의 자진 신고로 이루어졌고, 이는 최초신고자의 자진 신고가 후속 기업의 신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EU 내에서는 카르텔 법 위반에 대해 거의 모든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였다. 합성고무 사안에서는 두 기업이 자진 신고하였고, 업무용 비디오테이프 사안에서는 세 기업 중 두 기업이 자진 신고하였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사안에서는 다섯 기업 중 네 기업이 자진 신고하였고, 절연개폐장치 사안에서는 열한 개 기업 중 여덟 개 기업이 자진 신고하였다. 자진 신고한 기업의 70%는 과징금이 완전 면제되었으며, 30%는 과징금이 감액되었다.

### 과징금 면제 및 감액 신청 요건

과징금 완전 면제 조치는 카르텔에 대한 조사 실시 및 승인 또는 EC 조약 제81조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EU집행위원회가 판단한 최초의 자진신고자(사업자)에게 부여된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위원회고시(2006)'에는 EU집행위원회가 카르텔 조사를

실시하고, 과징금 면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자진 신고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업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혐의 대상 카르텔 협정에 대한 상세설명. 예를 들어 목적, 활동과 기능,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혐의 대상 카르텔의 영향을 받는 범위로 추정되는 시장 규모, 정확한 데이터, 카르텔 관련 내용과 참가자, 자진 신고 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설명 등

② 신청자가 아는 한도 내의 혐의 대상 카르텔에 관계한 모든 개인의 성명, 지위, 사업장 및 자택주소(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혐의가 명백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③ EU 내외의 기타 국가에서 혐의 대상 카르텔 자진 신고 여부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위원회고시(2006)'는 해당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협력 정도까지 명기하고 있다. 자진신고자가 과징금 완전 면제의 혜택을 얻으려면 EU집행위원회 행정절차의 전 과정에 대해 계속해서 협조해야 한다. 또 고시는 자진신고자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사업자는 ① 입수한 또는 입수 가능한 혐의 대상 카르텔에 관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EU집행위원회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② EU집행위원회가 사실을 확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질문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최근의(또는 가능하면 이전의) 종업원과 이사가 EU집행위원회와 면담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혐의 대상 카르텔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파괴, 수정 또는 은닉해서는 안 된다. 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EU집행위원회가 당해 사안에 관한 이의고지서를 공표하기까지는 당해 신청에 관한 어떠한 사실 또는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종래의 위원회고시(2002)에 들어 있던 '자진 신고 후에는 카르텔 참여를 중지해야 한다'는 요건은 다른 카르텔 참가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되었다. 다른 사업자를 카르텔에 끌어들이거나 카르텔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사업자는 면제조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다. 단, 이

러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의 모든 요건과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과징금 감액 자격을 부여한다.

과징금 감액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제출 서류가 EU집행위원회 조사에 대해서 중대한 '부가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현 고시에도 규정되어 있다. 고시에서는 '부가가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정보가 해당 문제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정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 유력한 증거는 보충 증거를 요하는 진술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 신청 절차 및 사례

유럽에는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 EU집행위원회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과징금 면제와 감액 등 리니언시 제도 및 신청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면제 또는 감액에 관한 위원회고시(2006)'에는 '마커(marker)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즉, 과징금 면제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마커 신청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스스로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다. 만일 자진신고자가 지정된 제한기간 내에 과징금 완전 면제 신청을 완료하면, 제공된 정보와 증거는 마커의 지위가 인정된 날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리니언시 제도는 다른 카르텔 당사자보다 먼저 EU집행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진신고자에게 더 큰 프리미엄을 준다. 만약 EU집행위원회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즉시 철저하게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과징금 완전 면제의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부가가치)를 제공할 수도 없게 된다. 과징금 완전 면제의 조건이 충족되면 EU집행위원회는 조건부로 면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최종 결정 단계에서 모든 조건이 계속 충족되어 있을 경우 완전 면제된다.

한 예로, 염소산나트륨 카르텔 사건에서 Akzo



확대하였다(15일). 이러한 제도 개선 결과 2005년 이후 자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면 신청기업들이 자신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 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 수준을 카르텔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하고,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벌금, 징역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강력한 형사처벌은 카르텔에 참여한 사업자나 개인이 카르텔의 유인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 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청 절차나 감면 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2001년에 조사 개시 후 협조자의 감면 신청을 인정하고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반드시 감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자진신고자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리니언시 제도는 신설 당시 카르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여야 하고, ‘카르텔을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 때문에 그동안 리니언시 신청 건수가 낮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완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못했다.

한국도 이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리니언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2004년 법 개정 시 카르텔 과징금 부과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리니언시 제도 이용에 대한 유인이 더 커졌다.

2005년에는 최초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30% 감면하는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정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진신고자들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게 조사 초기에 조건부 감면 지위를 확인시켜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관련 제도 운영 및 절차를 투명하게 정하여 고시하였다.

2006년에는 서면으로 감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로 신청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 간이 감면 신청<sup>2</sup> 후의 보정기간을 종전(7일)보다 대폭

Nobel사와 그 자회사인 EKA Chemicals사는 해당 카르텔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에 최초로 신고하였으므로 과징금(1억 1,600만 유로)을 완전히 면제받았다. Finnish Chemicals사는 조사 도중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의 50%를 감액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015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카르텔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동 사안은 지리적으로 다른 네 시장(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독일)이 관계되어 있으며, 관련 기업은 시장에 따라 각기 다른 면제 혜택을 받았다.

벨기에에서는 KONE사가 최초로 해당 카르텔에 대해 자진 신고함으로써 과징금 완전 면제 혜택을 받았다. Otis사가 2심에서 40%의 과징금 감액을 받았고, ThyssenKrupp사가 3심에서 25%의 과징금 감액을 받았다. 룩셈부르크에서는 KONE사가 최초로 완전 면제를 받았고, Otis사가 2심에서 40%의 과징금 감액을 받았다. 네덜란드에서는 Otis사가 최초로 완전 면제를 받았고, ThyssenKrupp사가 40%의 과징금 감액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KONE사가 최초로 50%의 과징금 감액을 받았다. Otis사가 2심에서 25%의 과징금 감액을 받았고, Schindler사가 3심에서 15%의 과징금 감액을 받았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했더라도 유럽 또는 합중국에서 최종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의 법률 고문은 각 사례를 통해 EU집행위원회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EU집행위원회에 고지하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 한국의 리니언시 제도 현황

한국은 1996년 독점규제법<sup>1</sup> 개정을 통해 1997년부터 리니언시 제도를 실시하였다. 리니언시 제도 도입 당시에는 감면 요건을 ‘조사가 개시되기 전 최초로 카르텔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로 규정하였을 뿐, 감면

<sup>1</sup> 독점규제법은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 신고한 자와 조사 착수 후 조사에 협조한 자를 구분한다. 양자를 포괄하여 지칭할 경우 감면신청자(Leniency applicant)라 한다.

<sup>2</sup> 감면 신청 시 카르텔 개요만 신고하고 일정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보완하면 최초 신청 시기에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함.





# EU에 대한 영국인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편향성

## Survey confirms UK's eurosceptic attitude

People of the United Kingdom are renowned for their eurosceptic attitude and the EU's Eurobarometer survey, published in July, 2009, confirms this fact. This survey points out that British citizens receive a low level of information on the EU, and their awareness of benefits and projects related to the EU is poor. Negative press reports are also another main reason behind their eurosceptic attitude. The British government and media will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British people's views and opinions on the EU.

### 영국인의 EU에 대한 부정적 편견

프랑스나 독일인들에 비해 영국인들은 EU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에 대한 영국인들의 부정적 편견은 어느 정도일까. 그들은 왜 다른 회원국들보다 EU에 더 회의적인 걸까?

2009년 7월에 발표된 Eurobarometer의 조사결과<sup>1</sup>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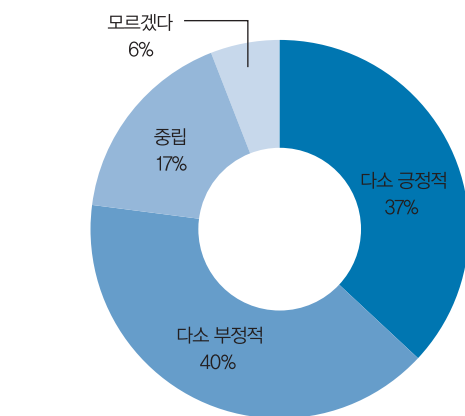
### EU와 영국 멤버십에 관한 영국인의 인식

2009년 16세 이상 영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7%가 EU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 보다 많은 40%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6분의 1인 17%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EU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적고(15~24세: 47%), 도시 거주민(47%)이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55%)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세 이상(54%)의 지방에 거주(46%)하는 교육 수준이 낮은(60%) 사람일수록 EU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44%)이 여성(37%)보다 EU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sup>1</sup> European Commission (2009, 7). Flash Eurobarometer: Attitudes towards the EU in the United Kingdom (Analytical Report).

### ★ 영국인의 EU에 대한 인식

질문: 일반적으로 EU에 대해 어떻게(긍정적 또는 부정적)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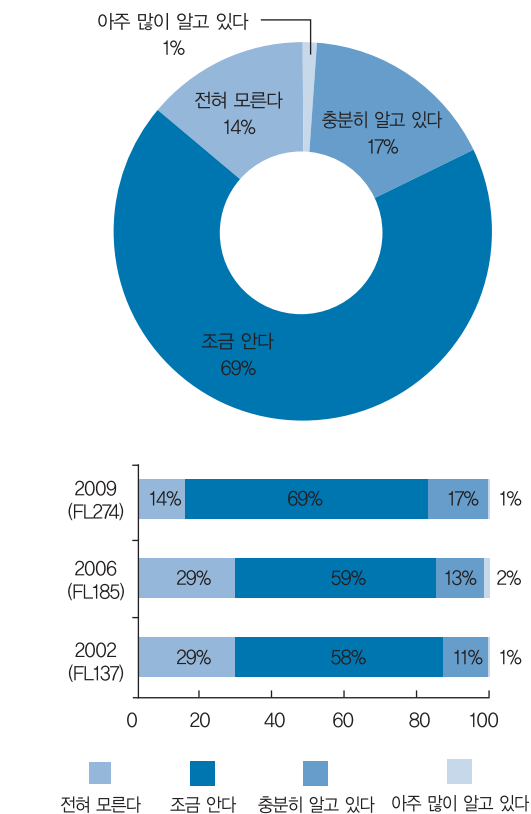
자료: Eurobarometer 2009

### EU에 대한 정보 부족

영국인의 EU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원인은 우선 EU에 대한 정보 및 인지도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EU 정책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18%가 EU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2년의 12%, 2006년의 1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응답자의 83%는 EU 정책 또는 기구 등에 관해 조금 알거나(69%) 전혀(14%) 모른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유럽의회 선거 바로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향상된 영국인의 인지도가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

### ★ EU 정책 및 기구에 관한 인지도

질문: EU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Eurobarometer 2009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남성(21%)이 여성(14%)보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EU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중 약 4분의 1인 27%만이 EU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육체노동자(10%)와 피고용자(15%)보다는 자영업자(26%)의 인지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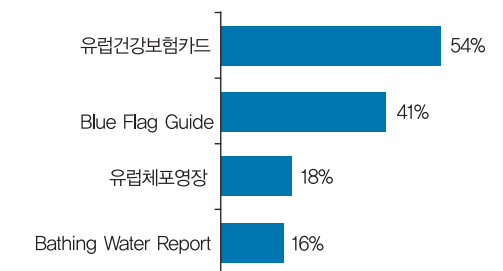
### EU 정책 이슈별 인지도

유럽의 보건과 사법, 관광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 EU 차원의 구체적 정책들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사안별로 다른 정도의 인지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회원국 국민들이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계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럽건강보험카드(European Health Insurance Card)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52%)보다 여성(57%)이, 교육 수준이 높은(59%) 젊은 층(15~24세의 62%)일수록 대도시 거주민(59%)일수록 이 사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EU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그룹의 이슈별 인지도가 역시 높게 나타났다. 또한 EU와 영국의 멤버십에 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는 그룹(65%)이 비호의적인 그룹(55%)에 비해 이 사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EU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지도

질문: EU 이니셔티브에 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 Eurobarometer 2009

유럽의 해변과 해수의 청결도를 정기적으로 감독 관리하여 친환경 라벨을 부여하는 Blue Flag Guide의 경우에는 4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43%)이 남성(33%)보다 연령별로는 중년층(40~54세 55%)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지방거주민들의 인지도가 더 높았다. EU에 대한 태도 측면을 고려할 때 Blue Flag Guide는 EU와 영국의 멤버십에 관해 지속적으로 비호의적인 입장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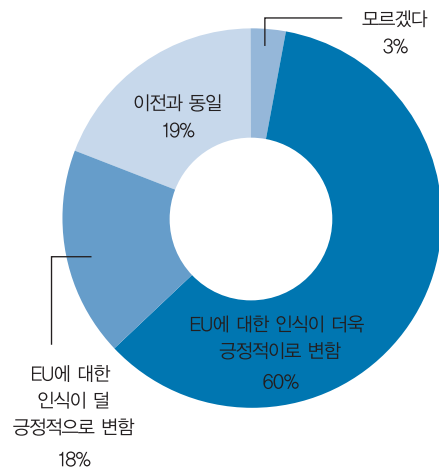




하던 그룹(57%)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과 Bathing Water Report<sup>2</sup>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8%와 16%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영국인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EU 이니셔티브와 EU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질문: EU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EU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나요?



자료: Eurobarometer 2009

나아가 위 EU 차원의 정책들에 대한 중요도와 이로 인해 EU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중요하거나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유럽건강보험 카드에 대해서는 90%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thing Water Report와 Blue Flag Guide에 대해서는 80%가, European Arrest Warrant에 대해서는 76%가 회원국 간 범죄자 공소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sup>2</sup> 해안 및 내륙(호수, 강) 수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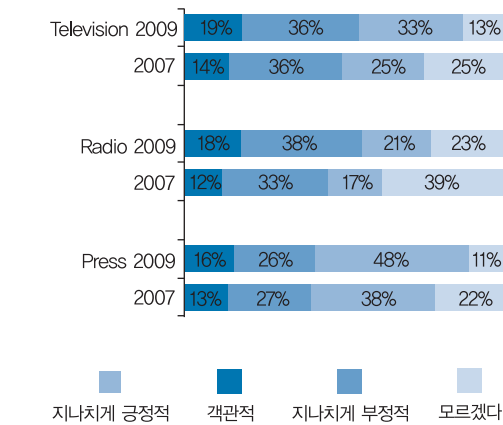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EU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지가 응답자의 EU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의 60%는 위 사건들에 대한 정책 주체로서 EU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16%는 EU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EU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었고, 18%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안별 특성과 이해집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EU 정책 이슈별 인지도가 높은 그룹이 EU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영국 언론의 편향적 보도

영국인들의 EU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EU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EU에 대해 지속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46%)가 비호의적인 경우(26%)보다 EU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EU에 대한 영국 언론의 보도 성향

질문: 영국 언론매체의 EU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부정적, 긍정적 또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Eurobarometer 2009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가 EU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방송매체보다 신문의 편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8%의 응답자가 신문이 EU 관련 기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EU와 영국 멤버십에 관해 지속적으로 비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 역시 신문의 부정적 편향성에 대해 동의했다.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영국 언론매체들의 편향적 보도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TV와 신문의 경우에는 부정적 편향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실제로 영국에는 아직까지 유럽조약의 난해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이 많다. 또한 EU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이를 국내 정부(43%)가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미디어(20%), 지방정부(14%)가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고, EU 기구(6%)의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했다. 따라서 영국 대중의 EU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인식을 증가시키려면 정부의 노력과 미디어의 편향성 극복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

고주현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연구원

<sup>3</sup> 영국 일간지 *Guardian*과 *Daily Telegraph*의 부정적 편향을 보여주는 EU 관련 기사제목의 예.  
 - Premier League clubs fear EU regulations may tie their hands. (2010. 2. 3.). *Guardian*.  
 - Farmers fight EU plans to tag 30 million sheep. (2009. 2. 8.). *Guardian*.  
 - Threat to City of London as EU Parliament seeks to whittle away power to veto. (2010. 2. 2.). *Daily Telegraph*.



# 2010년 유럽의 M&A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

## One in five European firms planning M&A deal i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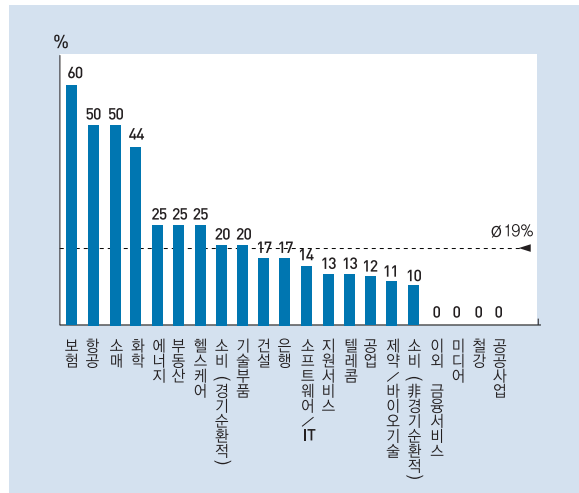
The Boston Consulting Group published its report “M&A: Ready for Lift off?: A survey of European companies’ merger and acquisition plans for 2010” in December, 2009. This report was prepared by the Boston Consulting Group based on a survey of corporate executives from more than 160 of the largest publicly listed European companies conducted jointly with UBS Investment Bank. Uncertainties in the world economy are reflected in wide variations in forecasts for economic growth and companies’ fundamentals, yet a significant proportion of European companies are planning a major M&A deal as the economy will start to recover in 2010.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09년 12월 〈M&A 시장 회복 가능성: 2010년 유럽 기업들의 M&A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이 UBS 투자은행과 함께 160개 이상의 유럽지역 주요 상장기업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sup>1</sup>를 바탕으로 2010년 유럽 기업들의 M&A 계획 및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에는 여전히 경제 전망 및 기업의 수익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2010년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M&A는 2009년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시장에 대한 기업 CEO들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M&A 시장이 정상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M&A를 원하는 이유로는 제품 서비스 제공 확대, 신규 시장 진출, 신규 소비자 및 공급망 확보,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10년 166개 유럽 기업들 가운데 19%(5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 꼴)가 최소 5억 유로 이상 매출 규모의 기업 인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중 50% 이상 기업의 시가총액은 200억 유로에 달한다. 한편 설문조사 대상 중 68% 기업의 M&A는 수평적 합병, 즉 동종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간의 합병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M&A는 타 산업 간 M&A(Transformational M&A)보다 규모가 작고 리스크가 적은 편에 속한다.

한편 M&A 전략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도 더욱 활발

### ★ 2010년 산업별 대규모 M&A를 실행할 예정인 기업 비율



주: 1) 설문에 참여한 총 166개 유럽의 상장 기업이 대상  
2) 5억 유로 이상 규모의 인수대상 기업을 '대규모 인수'로 규정  
자료: UBS, BCG (2009), CEO/Senior Management M&A Survey 2009.

해질 전망이다. 응답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 취약한 부문을 처분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지위 및 금융 상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 부실 부문의 처분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투명하고 탄탄하게 재정비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 새로운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세

<sup>1</sup> BCG와 UBS의 CEO 및 임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 5일에서 11월 12일까지 유럽 22개의 산업분야에 걸친 7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됨. 응답률은 24%였으며, 총 166명의 고위 임원들이 참여하였음.

스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인수기업은 인수자금 조달에 있어서 새롭게 부채를 발행하는 형식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운영자금, 혹은 이미 갖고 있던 부채의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형태가 아닌 이익연계지불(earn-out)<sup>2</sup> 방식이나 벤더파이낸싱(vendor financing)<sup>3</sup>과 같이 인수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기업들은 까다로운 신규 대출이 M&A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M&A를 위해 신규 대출이나 부채 발행을 할 것이라는 응답자 비중은 9%에 불과했다.

38% 이상의 응답자들은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대상 기업 간의 견해 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 산업 성과와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인수가격은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47% 이상의 기업들은 거시경제지표, 산업성과, 금융시장 상황 개선에 따라 M&A 기회모색에 신중을 기하여 차기 M&A에 착수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40%에 달하는 기업들은 현재 M&A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적절한 전략적 인수 대상기업의 부채를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기업과 사모 펀드 운용사가 처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곧 해결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장애요소가 없어지면 M&A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가치창출자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무조건 경제에 청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두고 보는(wait and see) 전략’ 보다는 선제적으로 적절한 M&A 전략 방안 및 시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료: Kronimus, André. (2009. 12.). M&A: Ready for liftoff? BCG.)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sup>2</sup> 기업 M&A 시 사용되는 조건부지불의 한 방법으로, 피인수기업의 장래 경영성과가 일정한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추가적으로 인수대금을 지불할 것을 인수기업이 약속함.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재무적 위험을 분담하게 되고 피인수기업의 전망에 대한 의견불일치에서 오는 거래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음. 이 방법은 피인수기업이 비공개기업일 경우에 자주 사용됨.

<sup>3</sup> 통신업체 등 장비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공급권을 주고, 그 대가로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대개 서비스 업체들이 무상으로 장비를 구입한 뒤 구매 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형태.

## 제5회 EU Core Circle 세미나 개최 The 5<sup>th</sup> EU Core Circle Seminar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5th Core Circle Seminar under the title "Chang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under the Lisbon Treaty and their effects on Korea." After two presentations were given at this seminar by Professor Jun Hae won and Dr. Park Chan Wook, participants had an opportunity to compare and contra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ose of the US congress. They also shared their views on possible effects of the changes in the EU's institutional arrangement under the Lisbon Treaty on external relations. The presenters emphasised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Parliament.

지난 1월 29일 연세-SERI EU센터는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위상강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5회 EU Core Circle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교안보연구원의 전해원 교수와 서울대학교의 박찬욱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참석자들은 유럽과 미국 의회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해보고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유럽의회의 변화가 한국에 주는 영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더욱 강력해진 유럽의회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국과 EU가 동반자 관계로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제4회 국회 브뤼셀 포럼 The 4<sup>th</sup> Brussels Forum

On the 9<sup>th</sup> of February,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4<sup>th</sup> Brussels Forum under the title "Korean firms' needs to prepare for the European Parliament's strengthened authority." Dr. Kim Deuk Kap, the director of the Global Studies Department at SERI, explained the EU's institutional changes and policy integration under the Lisbon Treaty. He also showed that the Korean firms must be prepared for these changes such as by understanding the lobbying process in the EU. In the following lecture, Professor Jun Hae won thoroughly explained the changes in the author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Parliament under the Lisbon Treaty. Professor Jang Hong gave participants an insider's view by giving a talk based on his experience of living in Strasbourg for 25 years. Lee Gang Rae, a Democrat member of Parliament and a chairman of the Centre, gave a brief account on his recent trip to the EU and highlighted the successful outcome at Korea-EU FTA negotiations.

지난 2월 9일 연세-SERI EU센터는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위상강화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4회 국회 브뤼셀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리스본조약 이후 강화될 EU의 정책 통합에 대비해 한국기업들이 로비스트 등 대응 마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해원 교수는 유럽의회의 변화된 권한 및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홍 교수는 25년간의 스트라스부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의회의 실상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포럼의 회장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유럽 방문을 통해 이룬 '한-EU FTA' 등 한국과 EU의 관계 진전 성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제1회 일본-한국 간 EU 현황에 대한 워크숍 The 1<sup>st</sup> Japan-Korea Graduate Students Workshop on EU Affairs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first Japan-Korea Graduate Students Workshop on EU Affairs between the 8<sup>th</sup>~10<sup>th</sup> February. The first day of the workshop included presentations and debates on the EU's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uring countries, its role in the global governance, and transnational issues. On the second day, participants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EU's history and economy. On the last day, there were presentations and debates on democracy and the European Parliament, and visions of Europe.

지난 2월 8~10일 3일간 일본 도쿄 게이오 대학에서 제1회 EU 현황에 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첫날에는 EU와 이웃 국가, 글로벌 거버넌스, 초국가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EU의 역사와 경제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민주주의와 유럽의회, 유럽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